

정보 · 지식 · 행동의 공유를 촉진하자

홍유수*

산업화 초기에만 하더라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말이 생소하더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인적자본은 기계나 시설과 같은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과는 달리 인적자원(능력)의 개발 결과가 개개인 자신 안에 축적된 것이다. 즉, 교육·훈련·경험 등에 의해 형성되어 체화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축적 결과가 미래의 소득 혹은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비해 최근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말은 매우 생소하다. 사실 이 개념이야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의 하나다. 사회자본은 신뢰에 기초한 안정적, 장기적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를 그 핵심구조로 한다.

인간이 지상에 출현하면서부터, 특히 원시공

동사회를 형성하였을 때부터 이미 사회자본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회자본 개념이 최근에 와서 더욱 부각되기에 이른 이유는 국가차원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사이버공동체까지 포함해서-의 새로운 개념 및 현실 때문이다. 전통적 공동체와는 달리 현대의 공동체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변화가 심하다.

과학기술계의 공동체로서는 연구소, 대학, 학회, 연합회, NGO 등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각각의 공동체는 물론 공동체와 공동체, 나아가서 사회전체와의 정보공유가 중요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국제화 및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사회와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공유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를 들어, 검색엔진 구글(Google)을 써본 사람은 그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며, 일일이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양의 체계화된 논문, 자료, 기타

*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e-mail: yshong@kiep.go.kr)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보와 지식은 사회자본의 형성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발전의 기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정보와 지식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사회자본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사회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소위 '각개약진형' 혁신모형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 및 지식(혁신)기반 경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창출, 확산, 축적, 활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가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정부 부처가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개발, 혁신,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자료들은 그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2007년을 전후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우리나라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의 수가 150건이나 된다고 한다. 구글(Google)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풀(pool)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져다 쓸 정보와 지식이 허다하다. 그런데 그 존재를 모르거나, 알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사장되는 정보와 지식은 또 얼마나 많은가.

과학기술조직 및 과학기술자 간의 네트워크 또한 이와 같은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귀중한 정보와 지식이 허다하다. 최근 EU의

제7차 기본계획프로그램(Framework Program)에 소정의 분담금을 내고 회원국 수준의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대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과학기술자들이 유럽 과학기술자와의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유럽 현장을 잘 몰라서 회원국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활용효과가 저조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외비의 보호라든가 기술유출 방지 등 정보와 지식의 무분별한 공유 혹은 확산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사장시키는 것은 큰 손실이다. 더욱이 왜곡된 정보, 혹은 정보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그 결과 사회자본이 파괴되기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회자본의 구조적 핵심인 네트워크의 특성은 바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깨어진 사회나 공동체에는 사회자본의 손실 혹은 파괴와 역기능이 발생한다. 사회자본은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으로서 한국의 과학기술계에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회의 많은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 및 왜곡에서 발생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 결과 사회자본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창의 및 자유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학기술계만이라도 국내외에서 정보와 지식 공유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로부터 행동의 공유가 가능하다. 한국의 과학기술 공동체들이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국제화와 세계화의 중심에 당당히 서서 신뢰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취약점들을 시급히 극복하



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과학기술계가 가장 취약한 부문은 무엇인가. 우선 세계 각 지역 및 개별국가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을 세계에 진출시켜 인력별, 기술별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화, 나아가 범세계적 차원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나치게 많은 부처별 계획의 수를 줄이고 종합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부처별 계획을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특징짓는 미시경제정책의 총괄기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과 타 정책과의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